

勞 動 經 濟 論 集  
第17卷(2), 1994. 12. pp.369~388  
© 韓國勞動經濟學會

## 南北經濟交流와北韓人力活用方案

李 允 鎬\*

### < 目 次 >

- |                    |               |
|--------------------|---------------|
| I. 머리말             | IV. 勞動力活用協力事業 |
| II. 分析의 觀點         | V. 結 論        |
| III. 北韓 勞動力에 대한 評價 |               |

### I. 머리말

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감에 따라 南北經協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높아지고 있다. 남북경협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脫冷戰의 질서 속에서 북한 또한 체제운영의 방법을 바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남북경협은 統一經濟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生産要素를 결합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經濟的 潛在力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관심도 매우 크다.

특히 북한의 노동력은 북한경제의 회생과 남한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기할 수 있는 남북경협의 최대가용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노동력에 대한 경제적 평가는 남북경협을 준비하는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남북한 경제협력에서 북한 노동력의 활용가능성과 그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본다.

\* LG 경제연구소 소장

## II. 分析의 觀點

정책이나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목표의 명료함이다. 남북경협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한 목표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통일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통일의 필요성이 반드시 일치된 내용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sup>1)</sup>는 점 때문에 남북경협의 목표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 될 것이다.

남북경협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통일경제의 확립이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즉 남북간 경제의 상호보완성에 기초한 경제협력의 深化를 통해 經濟統合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순조롭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의 과정이 상호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현재 남한측이 남북경협에 대해 가지는 관심은 비교적 양질인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sup>2)</sup> 그러나 실제 북한 노동력이 여타 지역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있는 것인가는 검증할 필요로 한다.

또한 경제공동체를 뛰어넘어 사회·정치적 통일을 이뤄야 하는 민족적 과제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노동력을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만 간주할 수 없다.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은 북한 노동력의 질과 특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사회통합을 위한 사전 준비라는 목표 또한 놓치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한다.

북한 노동력의 활용방안은 북한 노동력이 현재 갖추고 있는 경제적 잠재력을 주어진 조건으로, 중장기적인 경제통합과 순조로운 사회통합을 이뤄 나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북한이 점진적 개혁을 통해 남북경협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전제<sup>3)</sup>하에

1) 이 문제는 效率性(efficiency)과 規範性(normativeness)의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효율성과 규범성은 어느 한 쪽도 놓쳐서는 안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두 價値를 동시에 추구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2) 大韓商工會議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투자여건이 양호하다고 평가한 기업들은 첫번째 이유로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71.4%)을 꼽고 있다. 大韓商工會議所, 『南北韓 合作投資의 推進方案』, 1992.

3) 급속한 통일에 대한 대비책은 독자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되어 이미 많은 글이 발표되었지만, 對外經濟政策研究院과 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이 펴낸 『統獨의 經濟的 評價와 韓

서 경제적 효율성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남북경협 초기단계에서의 북한 노동력의 활용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논의를 여기에 한정짓는 이유는 정치·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제반 요소들은 '남북경협에서 기업과 정부의 역할분담<sup>4)</sup>', '사회·문화적 이질성 극복', '통일한국의 체제' 등 다양한 차원의 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차후의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의 대상으로 남긴다.

이 글은 먼저 효율성의 관점에서 북한 노동력에 대한 경제적 평가를 하였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남북한이 각자의 가용자원, 즉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 Ⅲ. 北韓 勞動力에 대한 評價

남북경협의 경제적 효과에 정부 및 기업들이 기대를 갖는 일반적인 이유는 남북한이 지니고 있는 생산요소 중 비교우위가 있는 요소들을 상호 결합시킴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는 곧 양질의 저렴한 북한 노동력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남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발휘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북한 노동력의 질을 교육수준, 임금수준을 준거로 평가해 본다.

#### 1. 教育水準

공식적인 지표로 본 북한 노동자의 교육수준은 남한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다. 1993년을 기준으로 볼 때 북한의 의무교육기간은 11년으로 남한의 6년보다 훨씬 길며, 전체 고등교

半島 統一(1993)』이 돌보인다.

4) 남북경협의 두 주체인 정부와 기업의 성격은 상이하다. 특히 기업은 기본적으로 활동의 기본원리를 이윤극대화에 두고 있으며 정치적 논리보다 경제적 논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기업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이윤을 확보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는 관점에서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 또한 기업의 기본원리를 손상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속성상 통일경제의 합리적 산업구조를 확립하고 통일사회의 건전성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경협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분담은 매우 중요하며 정부의 역할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육기관 재학자 중 과학분야 전공자의 비율 또한 1987~88년 경우에는 남한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육수준을 양적으로만 평가할 때 북한 노동자의 질은 남한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양적인 측면만으로 북한 노동자의 교육수준을 평가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첫째로 북한의 교육의 質이 남한과 동등한 수준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교육시간의 상당부분을 군사교육과 정치사상 교육에 할애하고 있어 人的資本의 蓄積이라는 측면은 도외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구동독의 교육수준이 지표상으로는 서독에 버금갔지만 교육의 질적 차이로 인해, 통일후 서독의 많은 기업과 학교에서는 동독에서의 교육이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로 볼 때 지표만으로 북한 노동력의 질을 평가하기는 힘들다.

둘째로 노동을 통하여 얻는 知識과 熟練의 質에서 남북한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현재 남한의 생산시설 및 경영기법은 현대화되어 있는 반면 북한의 생산시설은 노후화되어 있다. 그리고 行政과 다른 의미의 근대자본주의적 經營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북한 노동자들이 생산현장에서 얻게 되는 지식과 숙련의 질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북한 노동력의 질을 남한 노동력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보다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서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중국·베트남의 노동력 수준에 비해 어떠한가라는 점이 남북경협이 본격화될 경우 노동력의 활용 측면에서 중요성을 띠게 될 것이다.

교육수준을 이들 국가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기존제도와 현재의 교육정책을 통해 대체적인 판단은 내릴 수 있다.

북한 일반노동자들의 교육수준은 의무교육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중국에 비해 문자해독률, 취학률, 평균교육연수 등의 측면에서 훨씬 앞서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우 의무교육기간이 12년이 되며, 1986년 「도이모이」(刷新)를 추진한 이후 인적자원 개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노동력의 교육수준은 상당히 높다. 특히 인력을 해외로 송출하여 선진기술을 습득케 하고 있어 자본주의적으로 훈련된 기술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다.<sup>5)</sup>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 일반노동자의 質은 중국보다는 앞설 것으로 판단되지만 베트남에 비해서는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남북경협에서는 언어의 동질성, 민족적

5) 호치민市的 기술인력 중 20%는 서방국가에서 기술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자본주의 기술에 익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천수 외, 『베트남 - 市場進出 指針과 事例-』, 베트남협의회, 1992. p.70.

<표 1> 남북한의 교육연관 비교

지 표	평가기관	북한(평가연도)	남한(평가연도)
- 문자해독률	World Almanac, UNDP	99.0(1991)	96.0(1991)
- 취학률	Eberstadt and Banister	90.0(1985)	94.7(1985)
	文教部	97.9(1986)	97.3(1989)
- 의무교육기간	統一院		
- 학생비율	統一院	11(1993)	6(1993)
- 고등교육기관	Eberstadt and Banister	24.1(1990)	24.6(1990)
등록자비율	文教部	2.6(1987)	3.2(1989)
- 고등교육	Eberstadt and Banister	10.0(1987)	10.2(1985)
이수자비율	文教部		
- 평균교육연수	UNDP	6.0(1980)	6.6(1980)
- 과학분야	UNDP	34(1987~88)	31(1987~88)
전공자비율			

- 주 : 1) 15세 이상 인구 중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인구의 비율  
 2) 6~16세 인구 중 취학자의 비율  
 3) 전체인구 중 학생의 비율  
 4) 전체인구 중 대학교 및 전문학교(교육대학 포함) 등록자의 비율  
 5) 전체인구 중 고등교육 이수자 전체의 비율  
 6) 25세 이상 인구의 평균교육연수  
 7)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학자 중 과학분야 전공자의 비율
- 자료 : 曹東昊, 『北韓의 勞動生産性과 適正賃金』, 1993.

유대감 등이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 2. 賃金水準

노동력의 질과 함께 임금수준은 유망투자지역을 비교·검토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외국투자기업의 임금수준은 발표시기와 자료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으며, 현재 북한에서 조업중인 조총련계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수준도 기업에 따라 다르다.<sup>6)</sup> 따라서 외국인의 대북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실제 임금수준은 새롭게 결정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북한이 외국기업에 요구하는 임금수준이 현재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기업에서 받는 임금수준보다 낮지는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외국기업

6) 曹東昊, 『북한의 노동생산성과 적정임금』, 『한국개발연구』, 제15권 제4호, 1993, p.31 참조.

이 지불해야 할 임금수준을 추정해 본다. 그리고 이를 기타 투자유망 대상국과 비교함으로써 북한 노동력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본다.

### 가. 북한 임금체계의 특성

북한의 임금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체제의 임금체계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노동자들이 수령하는 금액만을 단순비교해서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노동비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sup>7)</sup>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주택, 교육, 보건·의료 등은 국가재정을 통해 간접임금의 형태로 주어진다. 북한의 경우에는 기본식량과 아동의류까지 국가에서 배급한다.<sup>8)</sup> 따라서 사회주의국가에서 노동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임금은 자본주의 국가의 임금과는 그 내역이 다르다.

또한 국가가 보조하는 범위가 상이하므로 노동자의 임금을 자본주의적인 기준으로 환산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노동비용의 개념으로 파악해야 각국간 임금비교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나. 일반 노동자의 임금수준

북한과의 투자협력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초기에는 단순노동력을 활용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기 때문에 일반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대표적으로 추정해 보도록 한다.

외국인 기업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다고 했을 때 북한당국은 정부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임금으로 부담토록 할 가능성이 크다.<sup>9)</sup> 북한의 연간 정부보조금은 5인가족 기준으

7) 우리 기업이 중국시장 진출 초기에 사회주의체제의 임금체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중국과의 임금협상에서 실수를 범한 사례가 많았다. 중국 정부당국이나 중국측 투자파트너는 대개 상담시 기본급만을 제시하였고 실질임금의 내역을 밝히지 않았다. 중국의 통상적인 실질임금의 구성은 기본급(실질임금의 30~40%) + 보험료연금, 주택보조금(25~30%) + 성과급, 시간외수당, 통근비보조금(30~4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大韓貿易振興公社, 『中國經濟通商情報』, 북방포커스 I, p.234.

8) 북한의 GNP대비 재정비율은 타사회주의권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 朴進, 『北韓財政의 現況과 推移』, 韓國開發研究院, 1994.

9) 자본주의에서는 대부분의 소비생활은 소비주체에 의해 결정되며, 소비주체인 가계는 그 예산을 임금을 통해 얻게 된다. 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기초소비생활의 상당부분을 정부의 재정이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소비생활을 위해 지출되는 국가재정 부분을 외국인 기업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로 4,800북한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정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환산해 보자. Eberstadt의 추계<sup>10)</sup>에 따르면 1995년 북한의 노동가능인구(생산가능연령인구)는 1,51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1990년 66.5% 수준이었던 경제활동참가율이 1995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경제활동인구는 약 1,009만명이 될 것이다.

북한의 총인구는 1995년에 2,326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5인을 한 가구로 전제하면 총가구수는 약 465만 2천 가구가 될 것이다. 이 경우 가구당 평균 경제활동인구는 약 2.17명이 된다. 따라서 정부보조금을 노동자 1인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연 2,212북한원이 된다.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약 184북한원이다.

현재 북한의 일반노동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대략 75북한원<sup>11)</sup>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외국인 기업이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노동비용은 정부보조금을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184북한원)과 노동자가 직접 수령하는 임금(75북한원)의 합인 약 259북한원이 될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원을 달러로 환산할 때 얼마가 되느냐이다. 북한은 구사회주의권의 일반적 경우와 마찬가지로 복수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어 공정환율과 무역환율이 구분되어 있다.<sup>12)</sup>

공정환율은 대외발표용 경제통계의 달러환산에 이용되는데 국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화폐의 실질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반면 무역환율은 북한이 특정한 나라를 상대로 1년 동안 거래해 온 수출입물자를 국내 도매가격으로 평가한 총화폐가치와 무역상대국의 도매가격으로 평가한 총화폐가치의 비율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무역환율이 공정환율보다 북한화폐의 구매력을 상대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 북한의 경제지표를 추정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무역환율을 사용해 왔다.

자본주의적 기준으로 계산된 일반노동자의 임금(259북한원)은 무역환율(1달러=2.14북한원)을 적용할 경우 월 121달러가 된다. 그런데 이 임금수준은 1993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외국자본유치 경쟁국인 중국(상해 120달러, 대련 60달러<sup>13)</sup>), 베트남(56달러<sup>14)</sup>)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므로 무역환율을 임금결정에 적용한다면 북한은 임금수준에 관한 한

10) Eberstadt and Banister, *North Korea :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U.S. Bureau of Census, Washington, 1990.

11) 朴進, 위의 책, p.75

12) 1990년 현재 공정환율은 1US\$ = 1.01북한원이며, 무역환율은 1US\$ = 2.14북한원이다.

13) 週刊ダイヤモンド, 1994. 4. 9; KOTRA, 『中國經濟通商情報』, 북방포커스 I, 1994.

14) KOTRA, 「아국의 대베트남 투자업체 설문조사」, 북방현안레포트 93-14호, 1994. p.14

&lt;표 2&gt; 북한의 연간 정부보조금(5인 가족 기준)

	내역	보조금(북한원)
식량		500
의료	120원 × 5명	600
아파트임대	50원 × 12개월	600
무상교육	1,000원 × 학생 3명	3,000
아동의류배급		100
합계		4,800

주: 이 표는 북한 고위관리의 도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정부보조금액을 과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자료: Hyung Shik Kim, "North Korea", J. Dixon and Macarov(eds.), *Social Welfare in Socialist Countries*, 1992.

朴進, 『北韓財政의 現況과 推移』, 1994에서 재인용.

투자메리트를 가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sup>15)</sup>

하지만 현재 북한이 대외거래를 위해 적용하고 있는 무역환율도 사실은 북한원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무역규모가 왜소하고 교역품목의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일 상용품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무역환율이 구매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현재 북한경제의 상당분<sup>16)</sup>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암시장에서의 상품가격을 고려하면 무역환율이 북한원의 구매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sup>17)</sup> 중국의 경우 1978년 개혁·개방정책 이후 인민폐의 평가절하가 이뤄졌는데 1993년 인민폐의 공정한환율은 1978년에 비해 70%나 평가절하되었다.<sup>18)</sup>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의 길로 나설 때, 북한원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평가하기 힘들지만 북한원의 환율이 평가절하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어느 정도 평가절하가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 추정을 하는 것은 현재의 주어진 기초자료로써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소득수준을 중국과 비교함으로써 북한원의 적정한환율을 개략적으로나마 추정해 볼 수는 있다.

달러화표시 GDP는 자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소득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

15) 曹東昊(1993)는 북한노동자의 한계노동생산성 추계를 통해, 북한이 현재 외국인 기업에게 요구하는 임금수준(월 150달러)이 적정임금수준(87달러)을 초과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기업의 경우 자본장비율의 증대를 통해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과 환율적용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16) 『월간中央』, 1994년 10월호, '귀순자 김수행씨가 진단한 북한의 블랙마켓'.

17) 李永燮, 『南北韓 貨幣의 購買力 比較』, 『韓國開發研究』, 제15권 제2호, 1993참조.

18) 1994년 1월 1일부터 복수환율제도를 폐지하여 환율을 무역환율로 통일하였다.



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무역환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1993년도 북한의 1인당 GNP는 904달러이다. 북한의 경우 경제의 해외의존도가 낮고 해외자본의 유입도 거의 미미한 상태이므로 북한의 GDP는 GNP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중국의 1993년 1인당 GDP는 457달러이므로 1인당 GDP만으로 보았을 때 북한의 소득수준이 중국의 약 2배에 달하게 된다.

하지만 북한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현재에도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해 온 반면, 중국은 15년에 걸친 경제개혁을 통해 연 9% 이상의 성장을 지속해 왔다. 또한 북한은 식량난으로 대표되는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는 반면 중국은 일상적인 생활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북한의 경제수준이 중국보다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으로 비추어 볼 때 한국은행이 북한의 GNP추계를 위해 적용한 무역환율은 북한원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 북한의 적정환율을 도출하기 위해 중국과 북한의 소득수준이 같다고 가정하도록 하자. 이 가정은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최소한 북한경제를 과대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행의 북한 GNP추계는 북한의 무역환율(1US\$ = 2.14북한원)을 적용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역산하면 북한원으로 표시된 1인당 GDP는 1,934.6북한원이다. 따라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중국과 같은 457달러라고 가정하고, 이를 자국화폐로 표시된 북한의 1인당 GDP 1,934.6북한원과 비교하면 북한의 환율은 1US\$ = 4.14북한원이 된다. 이는 현재의 무역환율보다 43% 평가절하된 수준이다. 따라서 이 환율로 북한의 일반노동자의 임금을 환산한다면 월 62.6달러가 된다.

또한 북한원의 환율이 개방 초기 7년간(개혁의 제1단계) 약 40% 평가절하되었던 중국 인민폐의 추세를 따른다고 가정하더라도 북한원의 환율은 1US\$에 3.57북한원, 북한의 일반노동자의 임금은 월 70~75달러가 된다.

일반노동자의 임금이 60~75달러 수준이라면 중국 및 베트남과 비슷한 임금유인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언어의 동질성, 지리적 이점을 포함한다면 북한은 우리 기업의 유망한 투자지역이 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이 최초로 설치한 나진-선봉 경제자유무역지대는 노동력 활용의 관점에서 볼 때 한층 높은 경제적 유인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체제유지와 경제회생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제자유무역지대에 한정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무역지대에서는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수준을 타지역의 70%로 할 것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 규정이 일반적인 임금수준에도 적용된다면 투자메리트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된다.<sup>19)20)</sup>

결론적으로 볼 때 북한의 노동력은 교육수준과 임금수준면에서 여타 투자유망지역에 못지않은 경제적 유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 기업은 투자진출을 모색함에 있어 임금수준만이 아니라 언어의 동질성, 민족적 일체감, 지리적 근접성 등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IV. 勞動力 活用 協力事業

남북한간의 정치관계가 정상화된다면 다양한 차원에서 경제협력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협력분야를 크게 나누면 ① 교역 ② 위탁가공 ③ 투자협력 ④ 정부간 합의에 의한 시범사업 ⑤ 다국간 협력사업 등이 될 것이다. 이들 분야를 북한의 최대 가용자원으로 알려진 노동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보자.<sup>21)</sup>

##### 1. 委託加工

1993년 3월 북한의 NPT탈퇴 선언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관계로 인해 남북경협은 답보상태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위탁가공분야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1993년 위탁가공 총액은 438만 5천달러(반입기준)에 이르러 1992년보다 7.9배 증가했으며, 1994년 8월 현재 위탁가공 총액은 1,158만 5천달러로 이미 1993년 총액의 2.6배에 이르고 있다.

현재 위탁가공은 섬유제품부문에서 크게 신장되고 있는데, 섬유제품분야의 경우 직접적인 기술지도 없이도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타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숙련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1993, 12)

20) 임금의 구체적인 수준은 북한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대외경제협력위원회의 남포공단 관련자료에서는 급여수준을 먼저 제시한 후 “구체적인 것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최근 조총련 사업가 全鎭植(사쿠라그룹 前사장)은 일본의 월간지 『世界』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경영하는 합영기업에서는 북한측이 노동자의 임금으로 250달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80달러만을 지불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月刊 『世界』, 10月號.

21) 교역은 상품의 단순한 교환이므로 노동력 활용을 통한 협력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 3> 위탁가공 거래금액 분석(1991~94. 7)

연도	금 액 (달러)		
	반 출	반 입	임가공비
1991	13,406	22,880	6,800
1992	413,635	556,076	109,489
1993	3,610,788	4,384,634	781,876
1994. 7.	7,277,805	10,629,379	1,991,331
누 계	11,315,634	15,592,969	2,889,496

자료 : 럭키금성상사 추계치.

<표 4>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 구조

순위	대 분 류	금액(만달러)	비중(%)	주요구성품(비중, %)
1	비금속과 그 제품	29,366	31.3	철강 및 동제품 (85) 아연괴(9.6)
2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20,095	21.4	남성용 신사복(20)
3	광산물 생산품	7,804	8.3	시멘트(22.2) 무연탄(26.3) 마그네시아(9.6) 천연모래(9.6) 고령토(1.6) 기타, 아연광 등
4	산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7,058	7.5	수산물(89.6)
5	차량, 항공기, 선박 및 수송기 기	6,905	7.4	차량(승용차 중심) 및 그 부속품 선박(8.9)
6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부분품	6,420	6.8	—
상위 6개 품목 총계		77,948	83.1	
수출통계		93,814	100	

자료: KOTRA, '93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1994.

위탁가공이 처음 시작된 1991년 이후 위탁가공을 통한 거래금액을 분석해 보면 남북한 모두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1년부터 1994년 7월까지의 위탁가공을 위한 반출액과 반입액의 누계를 근거로 북한에 지불된 임가공비를 계산해 보면 288만 9,496달러인 것으로 추정된다.

임가공비는 제품을 남한에서 생산할 경우에 소요되는 전력비, 수도광열비, 감가상각비 등의 경비와 노무비용에 해당되는데, 임가공비는 평균적으로 제품원가에 해당하는 반입금액의 약 18~19%를 차지하였다. 반면 남한에서 생산되는 섬유제품의 제조원가를 검토해보면 노무비와 경비가 생산원가의 약 45%에 이른다.<sup>22)</sup>

이렇게 볼 때 위탁가공을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물류비용, 중계료, 기타 경비 6~7%를 감안하더라도 제조원가의 약 20%를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위탁가공은 상당한 경제적 유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악화된 대외경제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 들어 무역확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섬유산업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93년 북한의 대외무역통계를 보면 섬유제품의 수출액이 2억 95만달러에 이르러 총수출의 21.4%를 차지하였다. 이 중에서 일본과의 신사복 위탁가공이 5,008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일본, 독일, 홍콩과의 무역 중 상당한 부분이 위탁가공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남한과의 1993년 임가공 총액이 지속적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438만달러에 불과했으므로 섬유제품 중심의 위탁가공은 확대의 여지가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위탁가공이 섬유류제품의 한계를 뛰어넘어 노동집약적인 타산업으로 확대된다면 위탁가공은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 위탁가공이 타산업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기술자의 직접 지도가 불가능하고 설비의 제공이 허락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sup>23)</sup>

따라서 남북관계가 정상화된다면 기술자 방북을 통한 기술지도와 설비제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위탁가공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설비제공을 통한 위탁가공은 사실상 북한과의 합작사업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이후 합영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 2. 投資進出

남북한간에 정치적 신뢰의 기반이 확립된다면 남한기업의 對북한 투자진출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북한 노동력의 질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임금, 교육수준의 측면에서 볼 때 중국·베트남에 뒤지지 않는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할

22) 1991년 이후의 추세를 보더라도 노무비와 경비가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1991~94년 참조.

23) 일부 대기업에서 섬유제품 이외에 스피커 조립 등이 시도된 바 있으나 설제도를 통한 간접적 지도와 설비의 낙후로 인해 실패한 바 있다.

수 있다. 특히 경제통합의 필요성과 동북아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지리적 위치와 잠재성을 고려해 볼 때 북한으로의 투자진출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對북한 투자는 정치적 상황에 따른 투자위험도, 인프라개발수준, 산업 및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인 투자진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출업종을 검토해 보면 기술 및 자본집약적 업종들은 투자의 비대상, 장기간의 공장건설기간, 전력공급의 어려움, 이질체제에서 오는 숙련도의 차이, 연관산업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정치적 관계의 획기적 전환과 경제협력의 장기적 계획이 완전히 마련될 때까지는 대규모 투자진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의 투자진출에 있어 남한기업의 진출동기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임금상승, 기능공 부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수출 및 내수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최대가용자원인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낮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섬유, 신발, 피혁, 완구, 식품산업 등의 노동집약적 경공업부문은 노동력 활용 가능성과 함께 소규모 투자, 공장부지 확보 용이, 이동성 설비, 단기간 투자회수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어 초기에 진출할 수 있는 유망업종이라 할 수 있다.

남한은 전체 경공업 생산량의 60~75%를 수출하고 있는데 1989년 이후 수출물량은 연평균 5~6%씩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도 매년 4% 정도 줄어 1991년 말 현재 유휴설비가 총보유시설의 10%에 이르고 있다. 또한 향후에도 고임금과 인력부족현상 등 수출감소요인을 고려하면 보유시설의 10% 가량은 계속 유휴설비로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sup>24)</sup> 또한 이들 업종은 북한의 생활필수품 부족난 해결과 고용창출면에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어 북한의 경제적 유인도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sup>25)</sup>

### 3. 政府間 示範事業

1988년 이후 남북경협은 많은 굴절을 경험해 왔지만, 이 기간 동안 남한 내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의 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져 왔다. 특히 남북 상호간의 정치·경제적 신뢰를 쌓고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이 검토되어 왔다.

대표적인 시범사업으로 ① 비무장지대 공동개발 ② 금강산-설악산 공동개발 ③ 해외건설사업의 공동추진 ④ 북한자원의 공동개발 ⑤ 공동어로 및 수자원 공동개발 등이 거론되

24) 徐濟一, 『南北韓 輕工業分野의 協力增進方案』, 研究報告書 제318호, 産業研究院, 1994, p.75.

25) 徐濟一(1994)은 남한의 전체 유휴설비를 북한에 이전시킬 경우 약 2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었다.

이 중 북한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띠는 사업은 ① 북한자원의 공동개발 ② 공동어로 및 수자원개발 ③ 해외건설사업의 공동추진 등이다. 이하에서는 각 사업의 내용과 추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가. 북한자원의 공동개발

북한자원의 공동개발은 이미 우리측이 골재난에 직면했을 때부터 거론되어 온 사업으로 크게는 북한 광산물의 공동개발, 북한골재의 채취·반입, 대륙붕 해양자원의 공동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추진이 가장 용이한 것은 북한의 풍부한 골재를 반입하여 남한의 생필품과 교환하거나 달러로 결제하는 것으로 이는 골재난을 겪고 있는 남한의 경제사정에 도움이 되며 북한에도 노동력 활용의 여지를 제공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또한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은 매장량이 1,000억톤에 이르며, 요업원료인 마크네사이트의 매장량은 함북 단천의 용양광산이 36억톤을 웃돌고 있다. 이 밖에도 모래, 철광석, 아연 등 북한의 풍부한 자원들을 채굴장비의 지원을 통해 생산하여 남한으로 반입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공동어로 및 수자원 공동개발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에서 수산물 생산증대를 10대 목표의 하나로 책정할 정도로 수산업 개발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현대적인 어로장비 및 기술 부족으로 목표한 바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남한이 현대적 어로장비, 선박 및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고 이를 북한 노동력이 활용한다면 상호 경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다. 해외건설사업의 공동추진

해외건설사업에서의 북한 노동력 활용은 북한측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사업이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 극동지역의 벌목장에 수만명의 노동자를 파견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동지역에 대한 노동자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우리측에서는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북한측에서는 남한의 기술과 장비를 제공받음으로써 별다른 투자없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노동자의 집단망명 등에 대한 우려로 북한측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 라. 다국간 협력사업

동북아시아의 중국·러시아·북한·한국 등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상당부분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경협은 동북아시아의 다국간 협력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다국간에 이뤄질 수 있는 경제협력으로는 ① 나진-선봉 중심의 두만강지역 개발 ② 중국 동북3성과의 경제특구 연계방안 ③ 한·러·북 3각협력방안 등이 있다. 여기서는 북한 노동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유망한 것으로 여겨지는 한·러·북 3각협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 5>에 제시된 것과 같이 남북한 및 러시아는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다. 즉 한국의 자본, 북한의 노동력, 러시아의 자원이 결합한다면 3국의 성장잠재력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러·북의 3각협력은 러시아측에서 먼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KOTRA 모스크바 무역관에서 입수해 발표한 러시아 외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협력가능 분야는 농·림·어업에서부터 자원개발, 제조업생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sup>26)</sup> 특히 농수산업·임업 그리고 자원개발은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의 경우 하바로브스크, 연해주 등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곡물 및 채소 재배에 남한의 농업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생산물은 농산물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북한 및 러시아에 공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야쿠찌야, 마가단, 하바로브스크 지역의 목재채취 가공도 유망하다.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의 목재가공기술 및 기계류를 결합하여 제재목 등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여 일본을 비롯한 아태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시장을 개척한다면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

자원개발에 있어서는 쿠즈바스, 야쿠드, 마가단, 야쿠지야 등지의 석탄, 석유, 가스, 철강 생산에서도 3국간의 경제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 경제해역 및 공해상의 수산물 채취와 가공도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될 것이다.

현재의 여건하에서는 이와 같은 다국간 협력이 수행되기는 힘들지만, 남북관계가 정상화된다면 3국간 경제협력의 외교적 문제는 없으므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진출은 이미 이뤄지고 있고, 남북한이 아닌 제3국에서 이뤄

26) 『북방통상정보』, 통권 199호, 1월호, 1994년, pp.126~130.

<표 5> 한·러·북 3국의 상호보완적 경제구조

	장 점	단 점
한 국	- 자본, 기술, 경영능력 우수 - 생산장비 우수	- 에너지 및 자원 부족 - 미곡 이외의 농·축산물 부족 - 노동력 부족
북 한	- 광물자원 다소 풍부 - 자연적 입지조건 양호 - 노동력 풍부	- 자본, 기술 부족 - 장비노후화 - 석유, 농산물, 생필품 부족 - 경영능력 부족
러시아	- 비철금속 및 임산, 수자원 풍부 - 석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자원 풍부 - 약간의 중화학공업 발달(철강, 화학비료)	- 농업·경공업제품 부족 - 노동과 자본 부족 - 생산설비 낙후 - 경영능력 부족

자료 : 「북한투자실무」, 무공자료 93-85

<표 6> 한·러·북 3국 경제협력 유망사업

협력분야	협 력 사 업	협 력 방 안
농 업	아무르, 하바로브스크, 연해주 등 극동 지역에서 곡물 및 채소류 경작 및 가공	북한의 노동력, 한국의 농업관련 기술을 집합, 생산된 농산물은 농산물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북한, 러시아로 공급
임 업	야쿠지야, 마가단, 아무르, 하바로브스크 지역에서 목재의 채취 및 가공	제재목 등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여 일본, 한국 등 아태지역 국가들로 수출
어 업	극동지역, 러시아 경제해역 및 공해상에서 수산물의 채취 및 가공	러시아 및 한국의 선박, 북한의 어부, 한국 및 러시아의 가공기술을 집합
석탄개발	쿠즈바스, 야쿠지야, 연해주 및 하바로브스크 지역 석탄 개발	북한의 노동력, 한국의 설비(유휴설비 활용)를 결합, 석탄 및 관련제품 생산
에 너 지 자 원 개 발	야쿠트 가스田, 극동지역 석유개발	북한의 노동력, 한국의 재정지원 및 설비 결합 남북한을 연결하는 운송관을 건설하여 남한 및 일본으로 공급
철광개발	야쿠지야, 마가단, 하바로브스크 및 연해주의 철광 및 비철강석 개발	러시아의 엔지니어링 및 기술설비, 한국의 재정지원 및 장비, 북한의 노동력 결합
에너지, 석유화학, 전자제품 생산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에 TURNKEY BASE로 건설	북한에 대해서는 현금 혹은 구상형태로 보상, 한국 건설업체의 참여 가능
기 타	건설업, 한반도 종단 철로 재건 및 공동운영, 두만강 계획과 연계하여 전세계 교통요충지 건설 등	

자료 : 『북방 통상정보』, 1월호, 1994년, pp.125~130



지는 남북협력은 국내로의 정치적 파급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므로 북한이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된다.

## V. 結 論

단기적인 경제적 효율성에 비추어 볼 때 북한 노동력은 중국·베트남에 뒤지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 북한은 중국·베트남과 같이 개혁과 개방 노선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어, 제한된 지역에서 투자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경제상황을 미루어 볼 때 북한이 개혁·개방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희망적 기대를 할 수 있다. 현재 경제정책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다소 전향적인 태도는 이러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양상에 따른 다양한 준비를 수행하는 것은 우리들의 절실한 과제이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가용자원이 현실적으로 산업입지와 노동력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경제협력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정치적 관점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글의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여타 국가와의 경제적 교류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경제의 상호보완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정치·사회적 통합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남북경협은 순수한 경제적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의 대상이 통일한국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정치·사회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경협이 점차적으로 확대된다면 남북경협은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통합이라는 대전제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그 전개방향에 따라 21세기 통일한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경협, 나아가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체계적인 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정치·경제·사회적인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통일과 남북경협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김도경·신민영, 『남북한 경제협력 추진현황과 전망』, LG경제연구소 조사분석 92-01, 1992.
- 김원식·베르너푸쉬라, 『統獨의 經濟的 評價와 韓半島 統一』,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3.
- 大韓貿易振興公社, 『中國經濟通商情報』, 북방포커스 I, 1993.
- \_\_\_\_\_, 「아국의 대베트남 투자업체 설문조사」, 북방현안레포트 93-14호, 1994.
- \_\_\_\_\_, 「북한투자실무」, 무공자료 93-35, 1993.
- \_\_\_\_\_, 「베트남 투자환경」, 무공자료 93-56, 1993.
- 大韓商工會議所, 『南北韓 合作投資의 推進方案』, 1992.
- \_\_\_\_\_, 『韓國勞動市場의 構造의 問題點과 對策方案』, 1992.
- 朴 進, 『北韓財政의 現況과 推移』, 韓國開發研究院, 1994.
- 박천수 外, 『베트남 - 市場進出 指針과 事例-』, 베트남협의회, 1992.
- 북방통상정보 94년 1월호 통권 199호.
- 徐濟一, 「南北韓 輕工業分野의 協力增進方案」, 研究報告書 제318호, 産業研究院, 1994.
- 이태옥, 『북한의 경제』, 을유문화사, 1989.
- 李永燮, 「南北韓 貨幣의 購買力 比較」, 『韓國開發研究』, 제15권 제2호, 1993.
- 중앙일보사, 『월간中央』, 1994년 10월호.
- 全洪澤, 「實物指標에 의한 北韓의 GNP 推定」, 『韓國開發研究』, 韓國開發院, 제14권 제1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1993, 1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대외경제협력위원회, 「남포경공업기지와 관련한 자료」, 1992
- 曹東昊, 「北韓의 勞動生産性과 適正賃金」, 『韓國開發研究』, 제15권 제4호, 1993.
- 통일원,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37호.
- 韓國銀行, 『1993년 북한 GNP 추계』, 1994.
- \_\_\_\_\_, 『企業經營分析』, 1991~94년.
- 週刊ダイヤモンド, 1994. 4. 9.

日本貿易振興會, 『中國 データ・ファイル』, 第8版.

Eberstadt and Banister, *North Korea :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U.S. Bureau of Census, Washington, 1990.